

< 대청의의 미래를 위한 소박한 고민과 다짐 >

제9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부의장 신민기입니다.

오랜 만에 인사 올립니다.

우선 최근 의장단 재신임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일에 대해, **결과나 이유를 불문하고, 의장단의 일원으로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3,672표, 50%의 득표를 등 압도적으로 지지해주셨던 여러분들의 성원에 부족했던 거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글을 올리는 것부터 많이 망설였습니다. 괜히 ‘굽어 부스럼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9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부의장으로서, 금번 의장단 재신임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제 의견을 밝히는 것 또한 제게 주어진 중요한 책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소견이지만, 대청의를 걱정하는 저의 마음만은 알아주시고 경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1. 우선 이번 사태는, 진행과정마다 절차와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청의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 왔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가 아닌가 합니다.

(1) 이번 사안은 발의과정부터 심각하게 규정을 위배 하였습니다.

사소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발의를 위한 기본 요건인 ‘40인의 동의’ 요건도 지키지 않고 30명만으로 발의를 하였던 것은 원천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의장단 불신임 안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규정 제12조 ②항’에 따라, “40인 이상의 의원은 의장이나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이번 발의는 30인으로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발의요건 40인’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요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불신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40인이 발의하면 어떠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보면, 40인 요건을 위반한 것은 명백한 원천무효 사유입니다

- 이에 대해, 불신임을 주도했던 인물들은 대청의 홈페이지에 규정이 30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오류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는 제7대 의회규정이 게재되어 있는데, 이를 잘못 보고 했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입니다. 엄연히 대청의 규정에는 40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발의를 한 의원들도 이를 잘못 보고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청의 규정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잘못 게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잘못된 과거의 규정을 따른 잘못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학생들이 오해를 했다면 모를까, 대청의 의원이 규정을 잘못 보고 했다 것을 변명이라고 하고 있는지 어처구니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태도는 자신들의 규정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은 물론, 절차 위반에 대한 반성도 없는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들리는 말에 따르면,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30인'도 모으지 못해 고생했다고 합니다. 40인 요건을 의도적으로 위배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가진 사람도 다수 있는 거 같습니다.
- 물론 저는 이런 오류가 의도된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즉 이런 절차 상의 문제는, 대청의 규정이 개정되었음에도 이를 제때 수정하지 않은 사무국의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차 위배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결론적으로 이번 불신임안은 기본적인 제출 요건도 갖추지 못한 원천무효입니다

(2) 발의를 하였던 인물 중 일부가 운영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이후 절차에 개입하는 등 중립의무를 위배하였습니다

- 발의 절차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나, 이 외에도 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립의무를 지켜야 할 운영위원회 위원이 나서서 이번 절차 진행에 개입했다는 점입니다
- 제가 이의를 제기하기 전까지, 불신임에 찬성하는 '30인' 중 1인이 운영위원으로서 불신임 안 처리 과정에 개입하고 있었습니다. 불신임안 처리 절차가 불공정하지 않았느냐 여부를 떠나, 원칙적으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면서 약속까지 써야하는 운영위원의 중립의무에 위배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 저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결국 운영위에서 불신임에 가담한 운영위원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부당하고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배된다고 하여 이미 절차에서 배제되었습니다만, 그 자체로서 이번 절차 진행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가 합니다.
- 이를 보면서 저는 우리 대청의 위원들이 청소년으로서의 패기와 열정을 보여 주기보다, 마치 기성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패거리 정치, 편가르기 정치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쓸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청의 민의가 수용된 것이 아니라, 사적인 의도가 개입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발의를 주도한 목적이 ‘자신들이 더 해 먹기 위해서’라는 주장을 과연 떳떳하게 반박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 이는 청소년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위원이 갈등을 조장하는데 앞장 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상황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3) 이 과정에서 일부 운영위원도 절차를 위배했음은 물론, 엄정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배하고 편파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도대체 불신임을 처리하기 위해 의사결정정족수까지 개정하겠다니 도대체 제 정신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참을 수 없는 꼼수 중의 꼼수입니다

- 대청의 규정 제12조 ②항에 따르면, “의장이나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제출되면 의장은 이를 논의하기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는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통과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본회의를 통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 그런데, 모 운영위원은 불신임 절차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운영위원의 발언, 즉 “이번 불신임 건을 처리하기 위해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를 볼 때, 이는, 불신임안의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는 것이 쉽지 않자, 규정부터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이라는 점은 명확합니다.
- **도대체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것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불신임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 같으니, 불신임 절차 규정부터 고치고 불신임 하겠다는 것은 소급입법의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불신임 절차를 개정해야 하는 그 어떠한 이유도 명분도 없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그냥 규정부터 개정하자는 것은 마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 외에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청의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이러한 행동이 부끄럽지도 않으신지요?
- 불신임 절차를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은 규정의 취지 상 매우 합당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대통령 탄핵에 해당하는 절차를 법률개정

보다 현격하게 어렵게 해 놓은 것은 물론, 심지어 헌법개정보다 더 어려운 수준의 절차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즉 헌법개정의 경우 국회의원 ⅔가 개정안을 내면, 국민투표로 확정하는 것인데 반해, 대통령 탄핵의 경우, 국회의원 ⅔가 소추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의견만 제시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더욱이 일부 상임위원장이 보였던 행태는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운영위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의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절차 위반을 넘어, 비합리적이고 무리한 주장을 한 모 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만 달성하면 그만입니까? 대청의가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 또 이러한 비합리적인 선동에 휩쓸리는 일부 운영위원들도, 자신의 행동이 과연 엄정한 운영위원으로서 떳떳한지, 또 자신이 운영위원으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결국 이번의 불신임안 관련 사안은, 대청의의 민의가 수용된 것이 아니라, 일부 의원들의 사적인 의도가 개입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발의를 주도한 목적부터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 그러나 이러한 비합리적 시도는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의회규정 제3조), 이것이 6월 3일 개최된 총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입니다

(4) 무엇보다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안을 재심의하겠다는 것은, 대청의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대청의 민의를 왜곡하는 매우 잘못된 처사입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 아시는 대로, 지난 토요일 6월 3일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몇 가지 논의를 해야 할 사안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주요한 것으로 불신임 절차에 대한 규정개정과 불신임안에 대한 논의 등이 있었습니다.
- 정기총회 결과,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과적으로 규정개정 사안도 불신임 사안도 모두 부결 되었습니다. 즉 전국에서 많은 대청의 의원들이 참석하였습니다만, 재적의원 과반수가 모이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규정개정도 못했고, 불신임안도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1/10이상의 의원이 참석하여 적법하게 성립된 의원총회였지만, 규정개정의 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나 불신임의 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의원의 찬성)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 그런 이게 웬일입니까?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 불신임안을 다시 온라인으로 투표하겠단가요?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의원들 ⅓이상이 모일 때까지 이 사안으로 계속 소집하실 건가요? 그러나 이

는 소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동일한 사유에 대해 재심사를 하겠다는 것은 우리 헌법상의 원리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불신임안을 추진하는 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저희 의장단의 불신임안이 통과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의장단을 흔들어 대실 겁니까? 규정위반이고 뭐고 없이, 될 때까지 무한 반복을 하시렵니까?

- 저는 기존의 루머나 의혹에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 말이 있지만, 몇 년 간 대청의에 소속되어 있던 일부 연임 의원들이 굴러온 돌을 파내려고 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근거로 저의 지지자를 모아 저를 반대하는 사람을 제명해도 되는지요? 탄핵을 할 때도, 탄핵을 하려는 명분이 있어야 하고, 절차에 부합해야 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탄생한 현재, 대청의 의원이 모두 합심하여 우리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이때, 절차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이런 분열을 일으키는 의도가 무엇인지요? 도대체 어떤 이유로 모든 절차, 규정을 위배하고 이렇게 막무가내 행동을 하시는 건지요?

(5) 특히 의장단 불신임은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하는 사안으로서, 온라인으로 의사결정을 문겠다는 것은 더 심각한 규정위배입니다. 이는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로서, 저는 대청의의 명예를 걸고 기필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대청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더욱 심각한 것은, 6월3일 운영위 논의에 따르면, 이렇게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 사안을,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 온라인으로서 하겠다는 입장을 보여고, 6월5일 이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 현재 대청의는 크게 3가지 체계, 즉 의장단, 상임위원회, 각종 회의(정기회의/임시회의 /상임위원회의 /운영위원회)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각 체계별로 구성과 운영방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장단과 위원회의 경우는 구성방식과 권한이 주로 규정되어 있고, 회의에 있어서는 주로 권한과 운영방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령 상임위원회의의 경우, “상임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전반적인 활동을 논의하는 회의로서 매월 1회 이상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집회하며 상임위원회의 재적의원 2/3 이상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제22조 ①항).” 운영위원회의의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장단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개최한다(제23조 ①항).” 정기회의든 임시회의든 본회의는 반드시 오프라인만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는 매년 1회씩 집회하며 8월과 1월에 집회하되 필요에 따라 일정을 조정 할 수 있다. 의장단의 참석과 재적의원 1/10 이상 참석을 준수한다(제21조 ①항).”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의장단 불신임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로 통과됩니다(제12조 ①항). 즉 의장단 불신임 건은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장단 불신임 건은 본회의 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본회의나 정기총회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볼 경우라도 **본회의나 정기총회는 임시회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온라인 투표 건은 명백히 본회의 규정을 위배한 사안입니다. 본회의가 되기 위해서는, 명백히 서로 모여서 “집회”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본회의를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집회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집회요건도 ‘1/10’으로 완화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반드시 모여서 논의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온라인 투표를 통해, 1/10만 투표에 참가해도 본회의로 볼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 이러한 의미에서 6/3(토)에 있었던 운영위원회 논의는 규정 위반입니다. 더욱이 이날 임시로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 의장단은 발언권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온라인 투표를 하겠다 잠정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결정은 명명백백한 규정위반입니다. 대청의 규정상 의장단 불신임 건은 본회의 즉, 오프라인 상의 ‘집회’를 통해 의결되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는 도대체 어떠한 권한과 근거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명백히 답해야 할 것입니다.
- 이번 사안은, 단지 제9대 의장단의 개인적인 명예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의 권익과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대청의의 존립방식과 운영방침, 철학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 저는 제 9대 의장단임은 물론 대한민국 청소년으로서, 이러한 부당한 처사를 참을 수 없습니다. 기필코 원칙과 상식이 작동하는 대청의를 만들겠다고 다짐합니다.

2.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규정 위반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이를 방지하고 견제해야 할 운영위원회나 사무국이 이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감안,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에 다음을 요구합니다

(1) 운영위원회는 더 이상 규정위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금일(6/5)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서는
'6/3(토) 개최된 대청의 정기회의에서
의장단 불신임 안은 공식적으로 부결됨'을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제9대 의장단 불신임 관련 안건'은 이미 부결이 되었습니다
- 이를 재확인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 따라서, 별도의 운영위원회의 확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기왕 금일 6/5(월) 운영위원회가 소집될 것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
지금이라도 운영위원회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가 의장단의 불신임안을 재논의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음을 다시 지적합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투표하겠다는 것은 대청의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금일 있을 운영위원회는 투표방식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닌, 불신임 안건이 부결됐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며, 금번에 일어났던 일련의 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반성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혹시 운영위원회가 '온라인 투표로 다시 한번 더 신임을 묻겠다'든지 하는 추가적인 탈법적 의사결정이 있다면, 과연 이는 어떤 규정을 근거로, 어떤 권한으로 다시 논의한다는 것인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2) 사무국에 요구합니다.

사무국은 비록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동안의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 이번 과정에서 보여준 사무국의 행태로 볼 때,
사무국은 이미 사무국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절차위반의 발단은, 발의한 의원들의 규정에 대한 무지가 원인이고 비록 홈페이지에 제때 공지하기 않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긴 하지만, 그것이 주요한 원인이 된 것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 이번 의장단 재신임 여부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절차 위반 건도, 애초에 사무국의 게으름에서 촉발되었다 하더라도 과장이 아닙니다. 40인 발의요건을 준수하지 못한데 대해 사무국에서는 어떤 책임을 지실 겁니까?
- 문제는 사무국의 무성의한 행태가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일례로, 현재 대청의 홈페이지를 보면, 의회규정은 제7대 규정이 실려 있을 뿐만 아니라, 대청의 조직도 역시 8대의 조직도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홍보 문서는 극히 최근인 2017년 5월 말일 신문기사도 실려 있습니다. 홈페이지 하나 관리 못하면서 자신들 한 일에 대해 생색이나 내는 집단이라는 비판에 도대체 무슨 변명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 개인적인 친소관계를 떠나, 사무국은 이번에 발생한 일련의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무국이 우리가 내는 회비로 운영된다는 점을 들어 갑질을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사무국이 단지 대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장단을 무조건 도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은 아직 청소년으로서 아직 지식도 부족하고 경험도 모자라 성인 이신 여러분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이끌어주셔야 할 책임이 있는 사무국 직원이 이런 실수를 저지르시다니요?
- 저는 누구보다 사무국 분들과 친하게 지낸다 생각합니다. 대청의와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위해 고생해 주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드려야 하겠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노력과 고생이 이번 일로 인해 오명으로 바뀌어서야 되겠습니까?
- 진정어린 저의 조언에 조금이라도 동의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이번에 사무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3. 의장단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 청소년으로서,
대청의 의원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들께 당부와 약속의 말씀을 올립니다.

(1) 향후에는 상호 비방을 하거나 음해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악의적인 규정위반행위를 조속히 그만두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이번 과정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수석대변인이 사퇴를 하였고 일부 위원들은 제척기피 사유 등에 해당하여 절차에 배제되는 등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 주었던 수석대변인 등께서는 이 자리를 비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갈등이 있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대청의가 다시 단합하여 청소년의 권익을 위해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노력해 가야 합니다.
- 다만 향후에도 악의적인 음해와 규정위반이 있다면,
저는 끝까지 이에 저항할 것임을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2) 또한 이번 일이 향후 우리 대청의가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할 것을 약속합니다

- 비록 억울한 점은 있지만, 이번 일은 모두 의장단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취임한지 2달 밖에 안 지났다, 실제로 불신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 등 많은 생각이 들지만, 모두 변명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그러나 이번 일은 결코 의장단만의 문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고, 고쳐 나가겠습니다. 우리 대청의가 진정으로 청소년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성장통과 같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사안을 어떻게 마무리하냐에 따라 대청의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일인 중차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일이 대청의의 역사에 남아 앞으로도 우리 후배들에게도 교훈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 꿈수에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원칙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지 속에서 당선될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저희들이 내세웠던, '소통하는 의장단'의 면모를 되찾아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6.5

제9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부의장 신민기